

EU학회

브렉시트의 추진 동향과 주요 이슈

2017. 3. 3(금)

이학노 교수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I. Brexit 진행상황 및 향후 일정

- 2016. 6. 23, 영국 Brexit 국민투표 가결, 이민통제, 사법권 독립, EU 재정부담 해방, 자유무역 가능 등 기대.
- 2017. 1. 17, May 총리, Hard Exit (Clean Exit) 천명: EU 및 단일시장 탈퇴.
- 2017. 1. 24, 영국 대법원, 영국 정부 탈퇴법안의 의회 통과 필요 확인
- 2017. 1. 25, May 총리 백서(White paper) 발표 계획
- 2017. 2. 2, 백서발표
- 2017. 2. 8, 영국 하원 탈퇴 법안 통과, 498: 114
- 2017. 2. 20~ 영국 상원 탈퇴법안 상정 및 통과 예상(3.7 일 표결)
- 2017. 2. 23, 보수당, Copeland 하원 보궐선거 승리, May 총리 및 EU 탈퇴 법안의 상원 통과 무난 예상.
- 2017. 3월 말, 탈퇴법안 EU 제출 예정
- 2017. 3월말 이후, Lisbon Treaty 50조 발동: 영국의 신청은 불가역적이며 철회 불가능. 영국-EU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2년내 자동 발동.
- 2019. 3월말, 영국의 EU 탈퇴 확정

< White paper 의 12 key points >

1. Providing certainty and clarity – We will provide certainty wherever we can as we approach the negotiations.

2. Taking control of our own laws – We will take control of our own statute book and bring an end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in the UK.

3. Strengthening the union – We will secure a deal that works for the entire UK – for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and all parts of England. We remain fully committed to the Belfast Agreement and its successors.

4. Protecting our strong and historic ties with Ireland and maintaining the common travel area – We will work to deliver a practical solution that allows for the maintenance of the common travel area, whilst protecting the integrity of our immigration system and which protects our strong ties with Ireland.

5. Controlling immigration – We will have control over the number of EU nationals coming to the UK.

6. Securing rights for EU nationals in the UK, and UK nationals in the EU – We want to secure the status of EU citizens who are already living in the UK, and that of UK nationals in other member states, as early as we can.

7. Protecting workers' rights – We will protect and enhance existing workers' rights.

8. Ensuring free trade with European markets – We will forge a new strategic partnership with the EU, including a wide-reaching, bold and ambitious free trade agreement, and will seek a mutually beneficial new customs agreement with the EU.

9. Securing new trade agreements with other countries – We will forge ambitious free trade relationships across the world.

10. Ensuring the UK remains the best place for science and innovation – We will remain at the vanguard of science and innovation and will seek continued close collaboration with our European partners.

11. Cooperating in the fight against crime and terrorism – We will continue to work with the EU to preserve European security, to fight terrorism, and to uphold justice across Europe.

12. Delivering a smooth, orderly exit from the EU – We will seek a phased process of implementation, in which both the UK and the EU institutions and the remaining EU member states prepare for the new arrangements that will exist between us.

II. 경제통합의 효과

1. 정치적 동기

- 정치사회적 안정: 대내적 안정 및 대외적 안보
- 대외적 협상력(바게닝 파워) 제고
- 프로젝트 협력
- 내부 개혁의 추진

2. 경제적 동기 (Handbook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III, G. Grossman and K. Rogoff, 1995)

- 무역량 증대 효과: 무역비용 감소, 교역조건 효과
- 생산량 증대 효과: 규모의 경제(경쟁), 다양성(variety) 효과
- 집적(agglomeration) 효과 및 투자 효과

3. EU 통합 및 Brexit의 효과

< 잠정적 결론 >

구분	EU 통합	브렉시트	
	EU27(영국)	EU27	영국
정치적 동기			
1. 정치사회적 안정(안보)	++	-	-
2. 대외적 협상력	++	≈	-
3. 프로젝트 협력	+	≈	-

4. 내부개혁의 추진	++	-	≈
경제적 동기			
1. 무역량 증대	+	≈	-
2. 생산량 증대	+	≈	-
3. 집적 효과 및 투자효과	+	≈	-

III. Brexit 추진 동향 및 주요 이슈

1. 영국 EU 탈퇴 부담금 cf. the Economist, Feb 17

- 600억유로(또는 640억달러) 상당 추정
 - ✓ 영국이 이미 EU 예산안(2020년까지의) 을 승인했으므로 의 무가 발생한다는 논거.
 - ✓ Brexit가 영국에 절약해 줄 3억5천만파운드(또는 4억4천만 달러)/주 보다 훨씬 큰 금액(잔류파들의 견해)
 - * 런던올림픽 5회 개최 가능 금액
 - = 금액 산출 =
 - i 연례 예산부담액과 예산 최대치와의 차이: 292억유로
 - ii EU 연금 부담액: 250~730억유로
 - iii Cohesion fund: 174억 유로
- EU: 先부담, 後 후속 협정 협상
 - 영국: 동시(parallel) 협상으로 협상 조건 항상 기대. 영국의 EU 시장 접근 등에 대한 좋은 조건과 부담금 연동.
 - ✓ 영국은 발틱지역 공동 방어방 참여, 폴란드 인프라 지원

등을 부담금 경감 이유로 제시할 것으로 관측.

- ✓ EU측은 만약 영국이 부담금 지불치 않으면 독일, 프랑스 등 EU 핵심국의 부담 급증 우려. 부담금 문제로 영국-EU 후속 협상(무역, 정보공유, 과학공동 연구 등) 난항 예상되고 그 결과 EU는 물론 영국에 상당한 타격 예상
- ✓ 영국은 부담금 경감을 위해서 시간을 끌 경우 후속협상이 차질 빚어 더 큰 손해를 볼 것을 우려하고 있고 EU도 영국을 압박만 할 수 없어 부담금과 후속 협정 협상 동시 진행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낙관은 금물임. EU 집행위에는 Brexit를 다른 회원국들에 대한 경고의 선례로 삼아야 한다는 매파들이 있음. 또한 May총리의 영국 국내 public diplomacy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음. 영국민은 White paper에 언급되지 않은 부담금문제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 친Brexit 언론은 막대한 부담금 총액 및 그 부당함(예컨대 EU 공무원들의 평균 연금이 영국인의 평균소득의 두배 이상으로 매우 높다는 점 등)을 부각할 것이고 May총리를 Thatcher 총리급으로 치켜세우면서 Thatcher 총리가 1984년 EU로부터 부담금 인하를 받은 것을 언급.
 - ✓ 적절한 타협이 기간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국과 EU 모두에 손해가 될 것임.
 - ✓ EU는 최종적으로 400~600억유로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 일부 강경 영국 인사들은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까지 주장. 국제사법재판소(ICJ)까지 언급되는 상황.
- 양측은 서로 협상 포지션이 유리하다고 주장
 - ✓ 만약 부담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EU측에 상당한 예산 부

족이 발생할 것이므로 타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EU측) 영국이 부담금 지불 없이는 후속 협상이 없을 것을 알고 있을 것이므로 결국 영국이 타협안을 제시할 것.

✓ 문제는 이러한 문제의 선례가 없고 EU측의 영국에 대한 선의는 대체로 사라졌고 비회원국으로 대우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

- 최근 (FT, 2.26) 이탈리아, 독일 등 회원국은 EU집행위원회의 선 부담 후협상 방침을 지지하면서 영국의 동시 협상을 거부, 압박.
 - ✓ 결국 타협으로 금액이 조절될 것임. 양측 모두 파국은 막으려 들 것으로 전망.

2. 최근 주요 경제 분야별 동향

<< 금융 >> the Economist, Feb 24

- 금융허브 기능의 런던지위 약화 및 주요국 HQ의 파리, 프랑크푸르트 등 이전 움직임.
 - ✓ 런던 HQ의 패스포팅 기능 상실: EU 27개국에 대한 서비스 제한
- 영국과 EU간 상호인증("equivalence") 예상되어 갑작스런 단절(cliff edge)은 안되겠지만 아무 문제도 없을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움.
 - ✓ 그러나 상호인증은 결제 청산(clearing house), 주식거래 등에 적용되지만 은행대출, 보험에는 규정이 없고 실제 적용은 정치적 결정에 좌우됨.

- 이탈하는 금융 및 인력 규모도 예상하기 어려움. 영국과 EU간 post-Brexit 협정 협상에 달려 있음. 런던의 금융기능은 상당한 정도 잔존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일부 이전 움직임..

- ✓ 2017. 3월말 Lisbon 조약 50조 발동되면 2년내 종료되어야 하므로 런던 주재 금융회사들은 사무실 등 이전을 검토하기 시작함.

- ✓ 이전은 EU역내가 많을 것이지만 미국, 싱가포르, 홍콩 등 EU 외도 예상.

< 파리 > 유치에 가장 적극적: “파리는 유럽내 유일한 국제도시로서 최적격으로 자부”. 프랑크푸르트가 경쟁자이지만 파리가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자평.

- ✓ 파리는 런던에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프랑스의 부정적 이미지(개입주의적 정책, 높은 조세, 일의 기피 등) 불식 노력: 2020년까지 법인세 인하 소개 (현재 33.3%에서 28%)

- ✓ 외국인의 소득세 면세기간 확대(5년에서 8년) 및 Marine Le Pen의 대선 승리 가능성 낮게 전망

< 프랑크푸르트 > 런던이 담당해온 유로 청산기능 중심 역할 기대

< 암스테르담 > 삶의 질과 영어가 강점. 그러나 금융규모, 주택 및 학교 등에서 파리, 프랑크푸르트에 비교열위.

< 더블린 > 금융중개 전문성, 인프라에서 비교열위.

- 프랑크푸르트는 1만명의 일자리 창출 예상, 파리는 금융 1만명 + 1~2만명의 법률, 회계 분야 일자리 증가 예상

- ✓ HSBC는 1,000명 일자리 파리 이전, 스위스 UBS는 1,000명 일자리 프랑크푸르트 또는 마드리드 이전 검토중, 룩셈부르크도 기대.

- ✓ 인프라 부족을 걱정하지만 유럽 각지에는 이미 많은 지점들

이 있고 최근 몇 년 사이 동유럽으로 이전하여 사무실 등 인프라 문제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최근(FT, 2.27), EU는 equivalence 관련하여 엄격한 규정(tough rules)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실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규정 위반시 인가 취소 등 페널티 등이 포함된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함.

<< 무역 >>

- 영국은 이제 완전한 자유무역국가(Truly Global Britain)로 변모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EU 탈퇴 영향을 만회하겠다는 계획.
 - ✓ 그러나 회의론자들은 EU 탈퇴 및 WTO 의존은 영국의 무역 규모를 1/5(20%)만큼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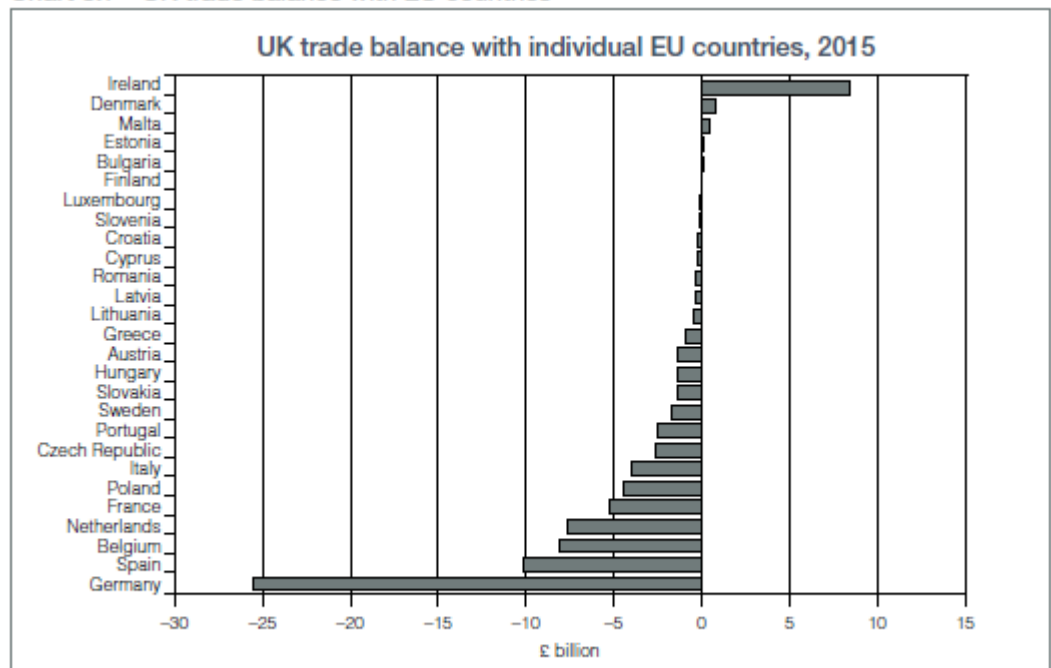
< 영국의 WTO 복귀 문제 >

- 영국이 EU의 WTO 양허표를 승계, 즉 CET를 유지하는 방식이 될 것이며 외관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 그러나 관세율 인상 등은 WTO 회원국들과의 일대일 양허 협상을 거쳐야 함.
 - ⇒잔류파들은 이것이 과연 경제주권의 회수인가 불만을 제기.
 - ✓ 기존 CET를 승계한다 하더라도 영국과 EU간 상품이동은 관세를 물어야 함. 따라서 supply chain의 비용이 증가함.
 - ✓ 할당관세(현재 EU는 약 100여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의 경우 영국, EU27간 할당관세 적용 물량 배분이 쉽지 않을 것임.
- WTO의 MFN 원칙으로 인하여 영국-EU간 몇 품목에 대한 특혜는 WTO하에서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 EU와의 FT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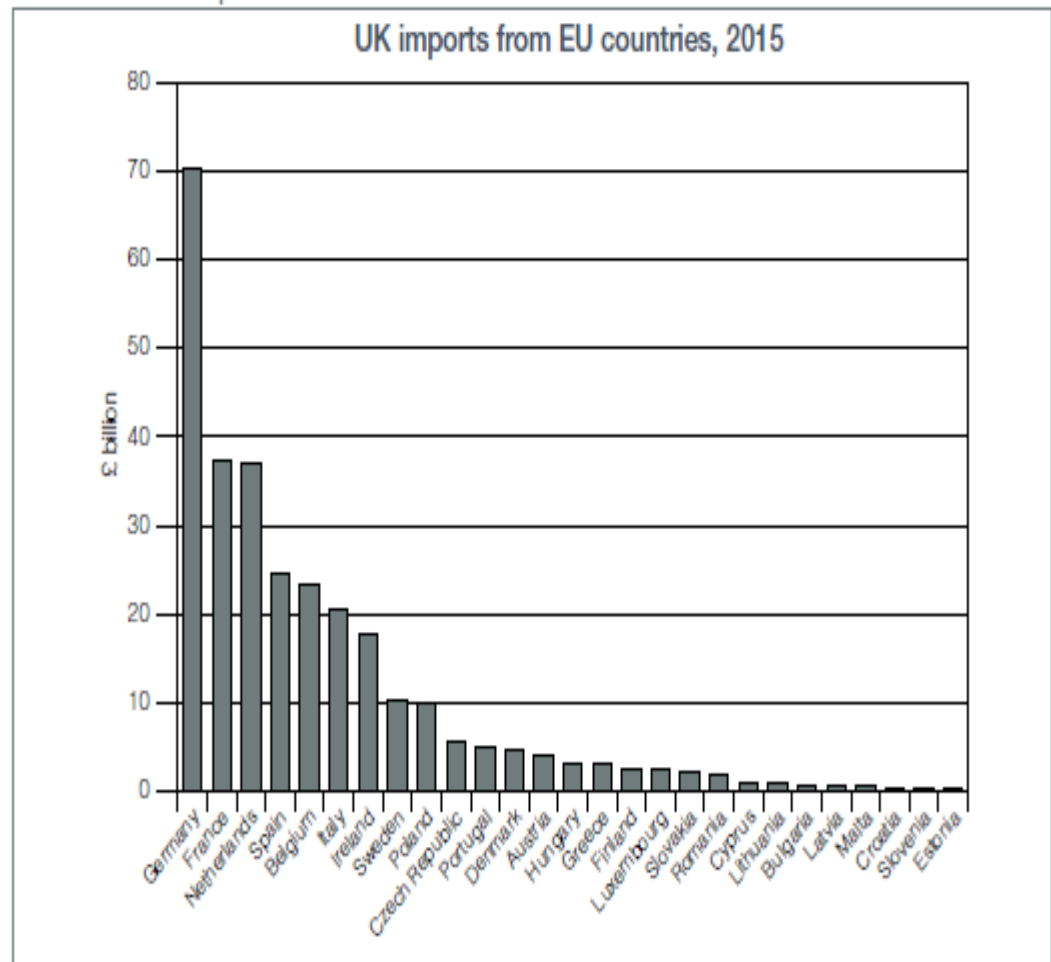
- 영국은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추구한다는 계획: 야심차고 종합적인 FTA 협정과 새로운 관세동맹 추진. 몇 분야에서 현재의 EU단일시장 요소 승계 (white paper)
- 영국과 EU는 연간 6천억 달러 규모.
 - ✓ EU는 영국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고 영국은 EU27개국 전체로 보아 가장 큰 상품수출 대상국(white paper).
 - ✓ 영국의 EU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약 50% 수준, EU의 영국 무역 비중은 5% 수준.
 - 2015년, EU는 2,910억 파운드 상품 및 서비스를 영국에 수출, 영국은 EU에 2,300억 파운드 상품과 서비스 수출
 - EU가 610억 파운드 흑자(상품 890억 파운드 흑자, 서비스 280억 파운드 적자)
- 아일랜드 제외하고는 영국이 거의 모든 회원국에 적자

Chart 8.1 – UK trade balance with EU countries



Source – ONS⁴⁰

Chart 8.2 – UK imports from EU coun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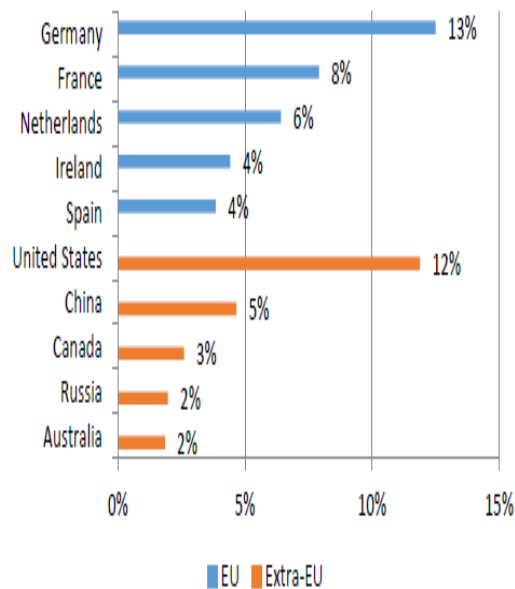


Source – ONS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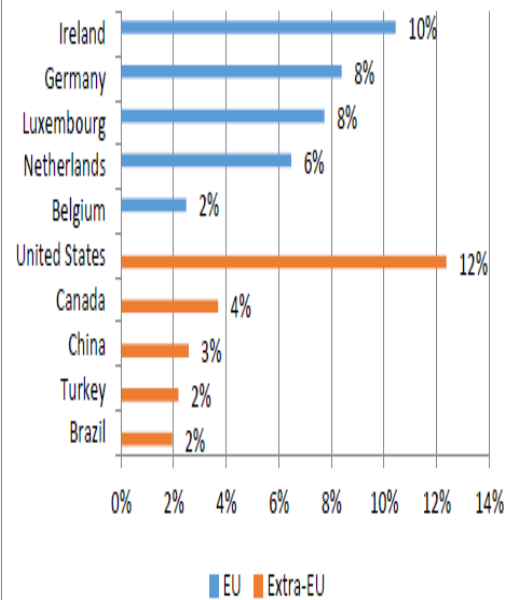
8.6 Close trading relationships with the EU exist across a range of sectors. The UK is a major export market for important sectors of the EU economy, including in manufactured and other goods, such as automobiles, energy, food and drink, chemicals, pharmaceuticals and agriculture. These sectors employ millions of people around Europe.

8.7 The UK exports a wide range of products and services to the EU. For example, exports of motor vehicles,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financial services and other business services all account for significant shares of total UK exports to the 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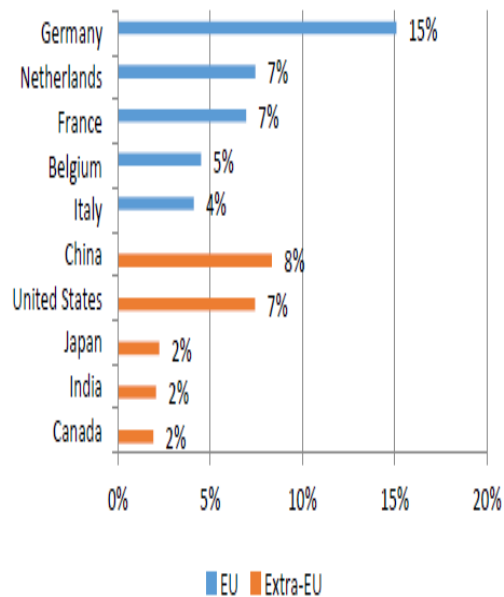
UK Trade in Goods: Top 5 Export Partn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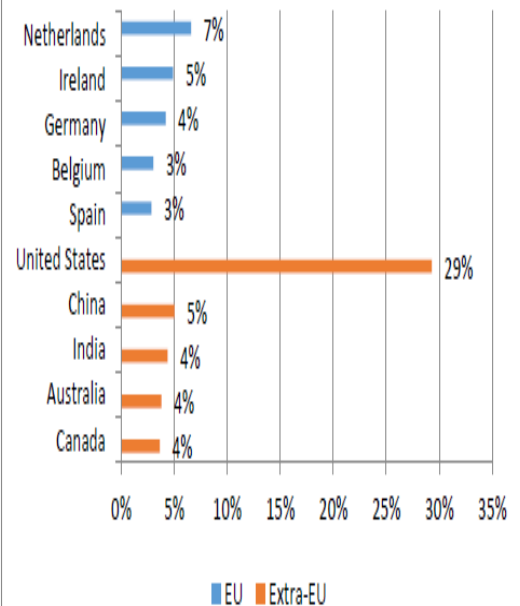
UK Trade in Services: Top 5 Export Partners



UK Trade in Goods: Top 5 Import Partn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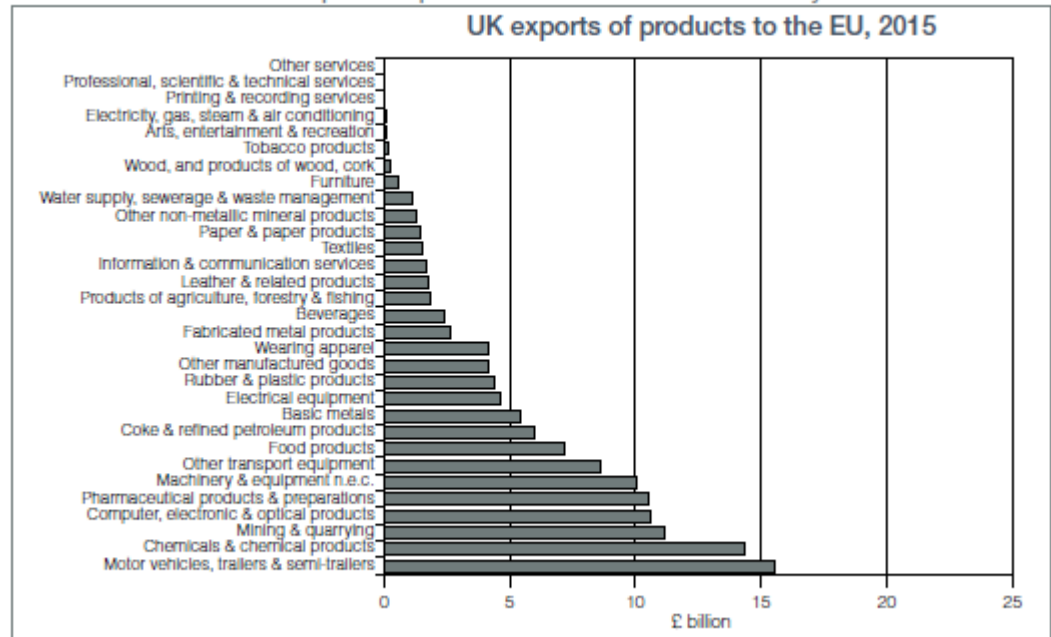


UK Trade in Services: Top 5 Import Partn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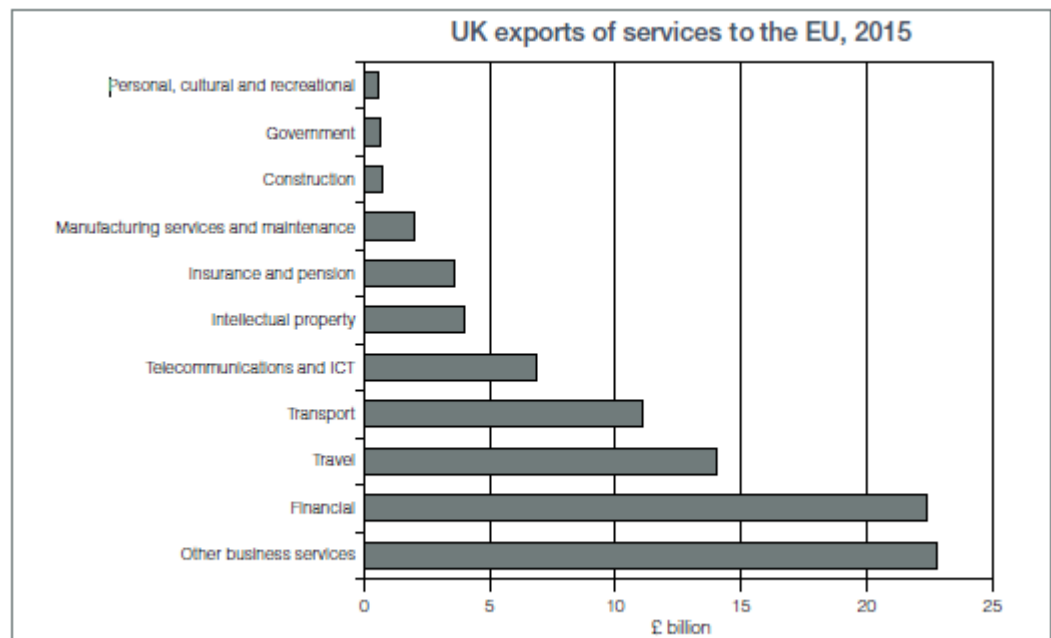


- 영국은 EU의 주요 제조업 품목 수출대상국: 자동차 부품, 에너지, 식음료, 화학, 의약품, 농업 등
- ✓ EU는 영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 대상국: 자동차, 화학, 금융 및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등

Charts 8.3 and 8.4 – UK exports of products and services to the EU by sector⁴²



Source – ONS⁴³



Source – ONS⁴⁴

Cf. 5대 분야 분석

가.상품

나.농업

- EU의 CAP, CFP

- 영국이 수입초과 상태, EU국가의 영국 영해 어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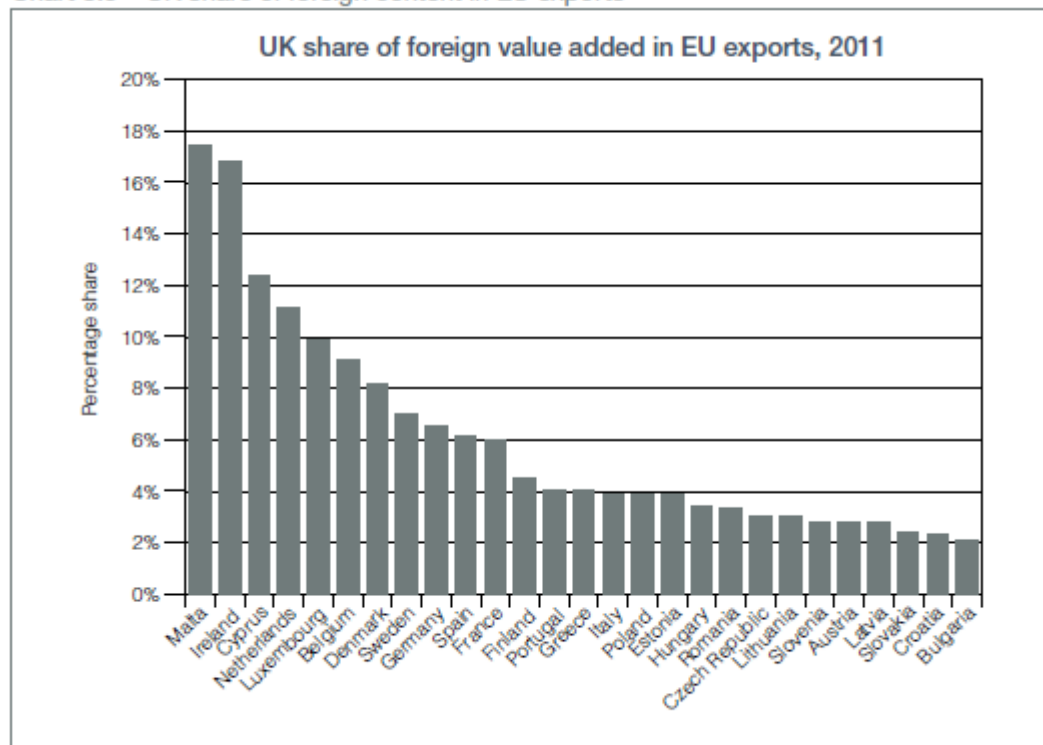
다.서비스

라. 금융서비스

마. 운송, 에너지, 통신

- 영국 부품 등은 EU 회원국들의 상품에 포함되어 수출됨. 각국의 수출 중 영국 content는 2%(불가리아) ~ 17%(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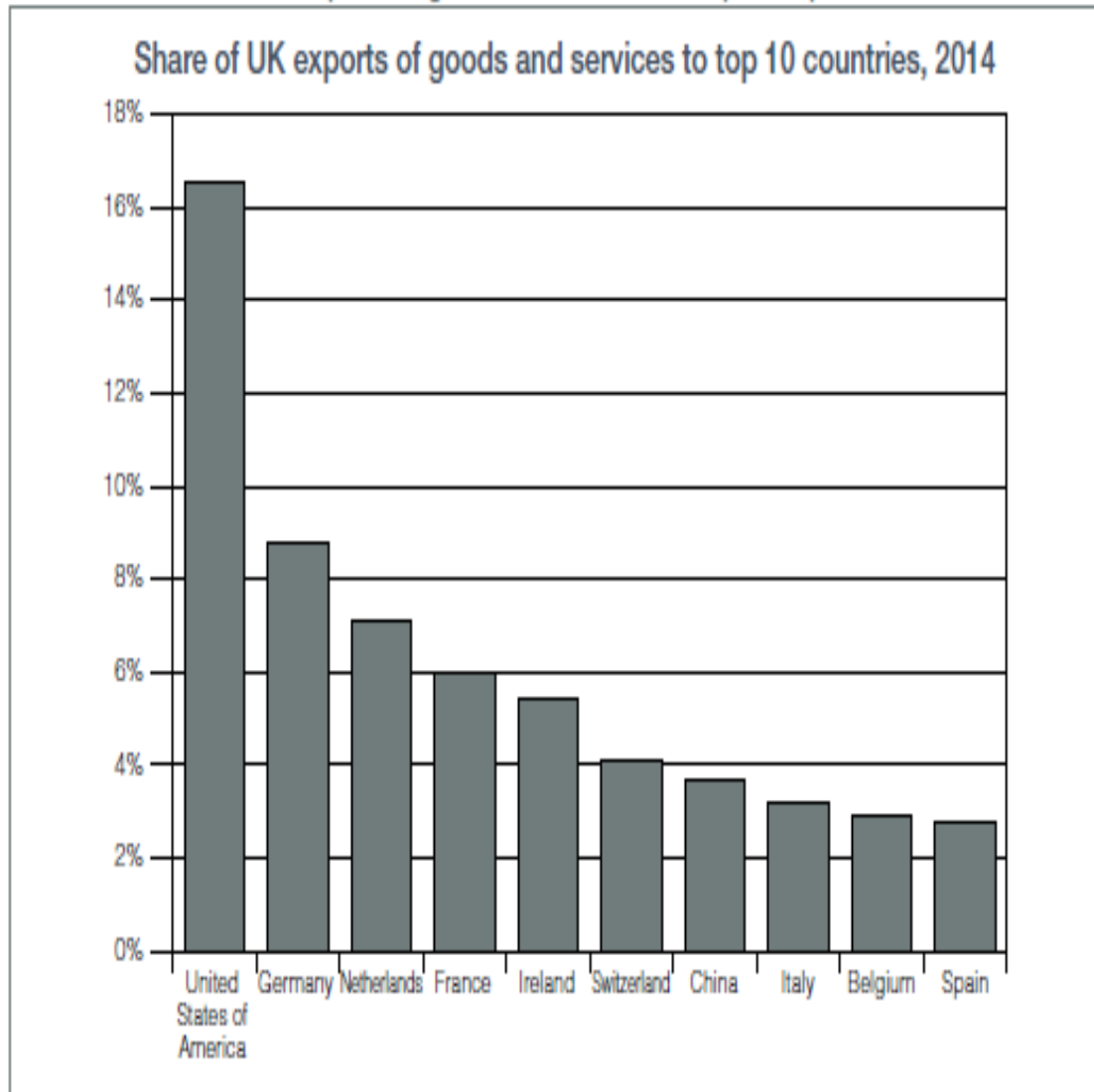
Chart 8.5 – UK share of foreign content in EU exports



Source – OECD⁴⁷

- 영국의 대EU 수출비중은 2000년 54%에서 2015년 44%로 감소
 - ✓ 영국의 연평균 EU 수출 증가율(2005/2015, 2.5%)도 연평균 대 세계 수출증가율(동기간, 4% 이상)보다 하회
 - ✓ 단일 국가로는 미국이 영국의 제일 수출대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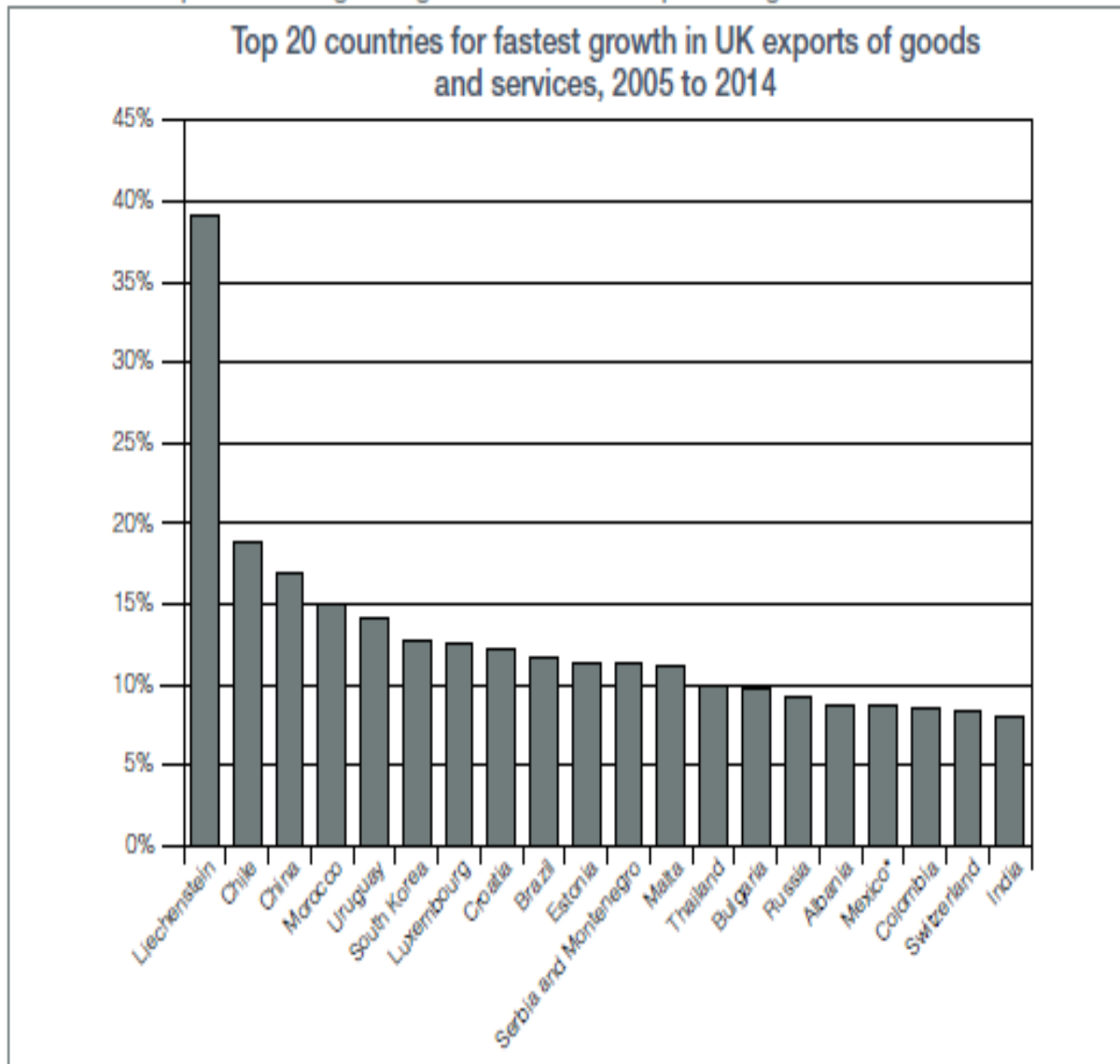
Chart 9.2 – Share of UK 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to top 10 export markets



Source – ONS⁷³

- 아시아 및 중남미 개도국들이 영국의 수출증가율 급증 수출대상국으로 부상: 한국 13%, 중국 17%, 브라질 12%, 멕시코 9% 등

Chart 9.3 – Top 20 fastest growing markets for UK 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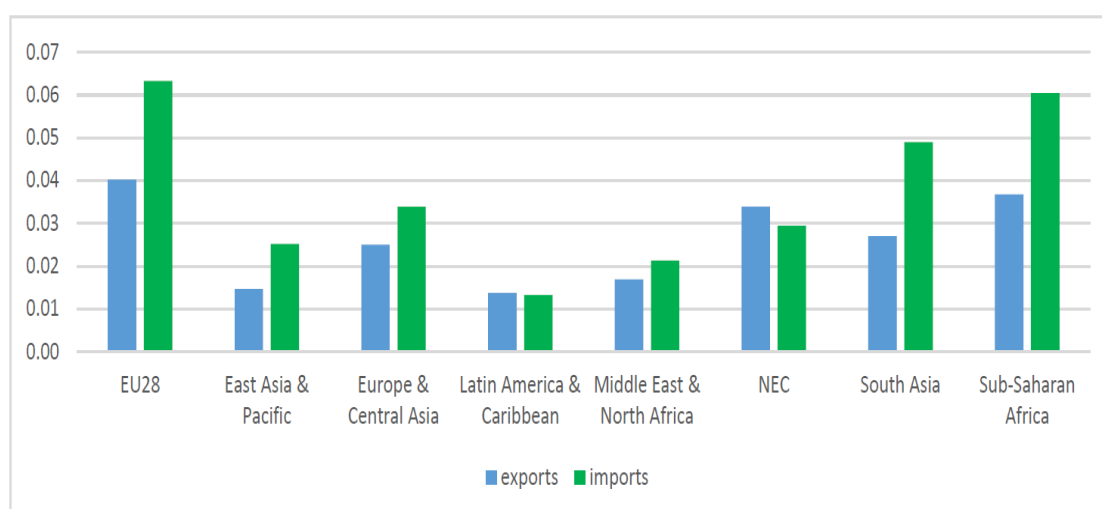
Source – ONS⁷⁷

- WTO, Trade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Brexit, July 11,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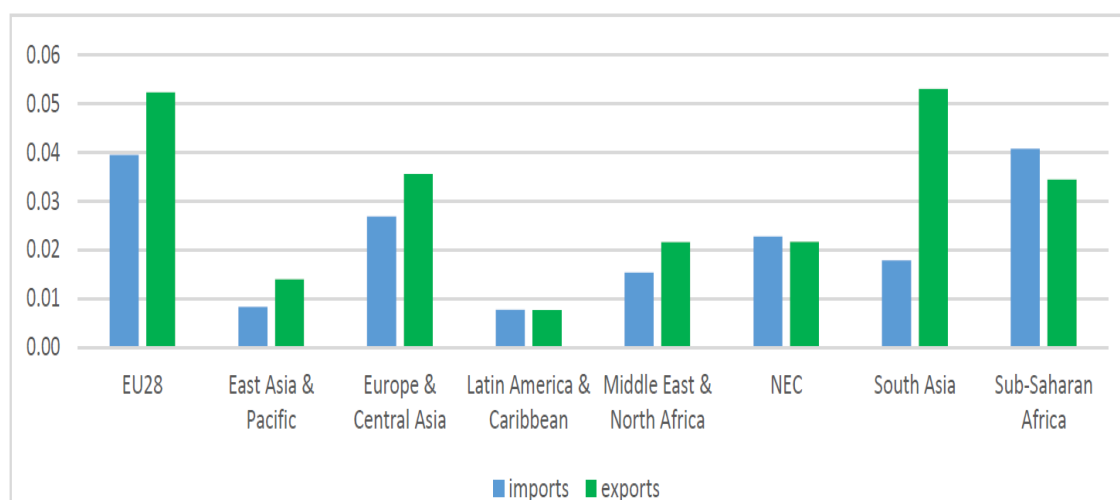
1. UK TRADE OVERVIEW

		UK Exports		UK Imports	
		Services	Goods	Services	Goods
Extra-EU	Millions	\$ 135,599	\$ 212,739	\$ 108,268	\$ 243,531
	%	52%	48%	66%	44%
EU28	Millions	\$ 124,412	\$ 228,725	\$ 55,527	\$ 308,208
	%	48%	52%	34%	56%
Total		\$ 260,011	\$ 441,464	\$ 163,795	\$ 551,739

Relevance of the UK in the export and import bundles across regions of the world:
Exports to the UK or imports from the UK as a share of total exports or imports [yearly averages for 2011-2014])



Relevance of the UK in the intermediate export and import bundles across regions of the world:
Intermediate exports to the UK or imports from the UK as a share of total intermediate exports or imports [yearly averages for 2011-2014])



- 영국은 가장 자유로운 무역협정 기대
 - ✓ 특히 자동차, 금융 분야에서 영국에 특혜적 협정 기대
- May 총리는 2년내 협상 종료 계획으로서 transition period는 없을 것이지만 분야별로 단계별 이행 계획은 필요할 것으로 언급.
 - ✓ EU가 영국과 나쁜 협정(bad deal)을 맺는다면 EU도 불행해질 것이라고 언급. 영국도 높은 수입관세 부과할 것. "No deal is better than a bad deal."
 - ✓ May 총리는 EU가 영국의 금융 및 정보분야 혜택을 잃을 것이라고 위협.
 - EU 아니더라도 영국은 역사상의 무역국가로 싱가포르처럼 될 수 있다고 언급.
 - ✓ EU는 영국에 대한 cherry picking 없다는 확고한 입장.
- EU는 다수 회원국간 의견 조정으로 2년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사례가 없음. 캐나다-EU FTA는 7년 소요되었고 아직도 발효되지 않음(네덜란드 Walloon 지역의 반대?). 최근 ECJ는 영국과의 FTA는 각국 및 각 지역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을 판결.
- 또한 WTO 제24조에 따라 특정 국가의 특정분야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 쉽지 않음(substantially all the trade)
- EU는 영국이 더 힘들 것이며 EU를 압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닐 것으로 생각. 영국은 비관세 장벽에 직면하게 되고 자동차, 의약품, 가공식품 등의 수출이 어려워질 것임. 영국의 EU 수출은 GDP의 12% 비중이지만 EU의 대 영국 수출은 단지 GDP의 3% 수준임. Demandeur는 영국이 아니라 EU27임.

< 미국과의 FTA >

-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빨리" 영국과 FTA 체결할 것이라고 함.
 - ✓ 2015년, 영국은 미국에 1000억 파운드(1,210억 달러) 수출 (EU에는 2,000억 파운드 수출)
- 영국과 미국은 상당한 "상호 보완적 파트너" (WTO)
 - ✓ (예) 영국은 특히 금융, 보험분야에서 미국에 수출.
- 그러나 품목에 따라 전망은 다름
 - ✓ 영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제한적(미국의 안전규격 등), 미국의 영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1980년대 식품안전성 문제 발생 이후)
 - ✓ 몇가지 진전이 있을 가능성: 스코틀랜드 하기스, 양 내장 함유 순대,는 대미 수출 금지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고 영국도 미국 GMO 식품이나 소고기 수입 개방할 가능성.
 - ✓ 데이터 공유 및 지적권 협정 등 "digital trading"에서도 진전 가능.
- 그러나 영국의 대미 수출이 기대보다 쉽지 않을 전망.
 - ✓ 영국의 중소기업은 EU와 미국의 상이한 규격을 충족하기 어려움.
 - ✓ 관세보다 비관세장벽이 문제임
 - EU의 대비 화학수출은 20% 관세상당의 비관세 장벽하에 있음.
 - ✓ 트럼프가 보호하려 하는 자동차 수출도 예상보다 어려울 가능성.
 - ✓ 영국은 미국 경제력의 1/6로 협상력 열세.
 - ✓ 미국은 영국의 보험시장 및 조달시장을 겨냥할 수도 있음.

< 대 아일랜드 >

- ✓ 아일랜드 국경 부활을 하여야 할 것인가?

< EU가 FTA를 체결한 53개국과의 FTA >

- EU-FTA의 템플레이트 사용 가능
- 그러나 상황은 변화할 조짐
 - ✓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준비
 - ✓ EU 전체에 대한 방정식과 영국 한 국가에 대한 방정식은 다르며 영국은 협상 포지션이 악화(변화)된 상황.
 - ✓ 영국이 유리한 점도 있음: EU가 보호하는 농업은 영국은 별로 없음(예: 스페인 보호 위한 감귤 관세 폐지 가능 등)
 - ✓ 농업국가인 호주와 뉴질랜드는 영국과의 FTA 체결 의향. (호주는 소고기, 뉴질랜드는 양고기)
 - ✓ 물론 스코틀랜드 양고기는 개방 압력 예상.
 - ✓ 미국 GMO 수입 또한 영국 농가와 소비자 반발 예상
 - ✓ 농업 등 개방 대가로 영국은 비교우위 분야인 서비스 시장 진출 가능: 은행 및 회계 등
- 2015년 영국은 2,250억 파운드 상당의 서비스 수출(총수출의 44%)하였고 1,380억 파운드 수입
 - ✓ 인도, 중국, 인니 등 서비스 경쟁력이 약한 개도국 기대
 - ✓ 보험분야도 잠재력 큼. 인도는 세계인구 비중 18%에 비해 보험가입은 2% 수준
 - ✓ 그러나 서비스는 가장 보호되는 분야.
- 기본적으로 반이민, 국내인력 우선 고용, 최저임금 인상 등 Brexit의 민심을 거스르지 않는다면 영국은 매력적인 투자 대상국이 되기 어려움.

- ✓ 영국은 살아남겠지만 더 가난하고 대내지향적인 국가로 남을 가능성. 자유무역을 지향하여야만 살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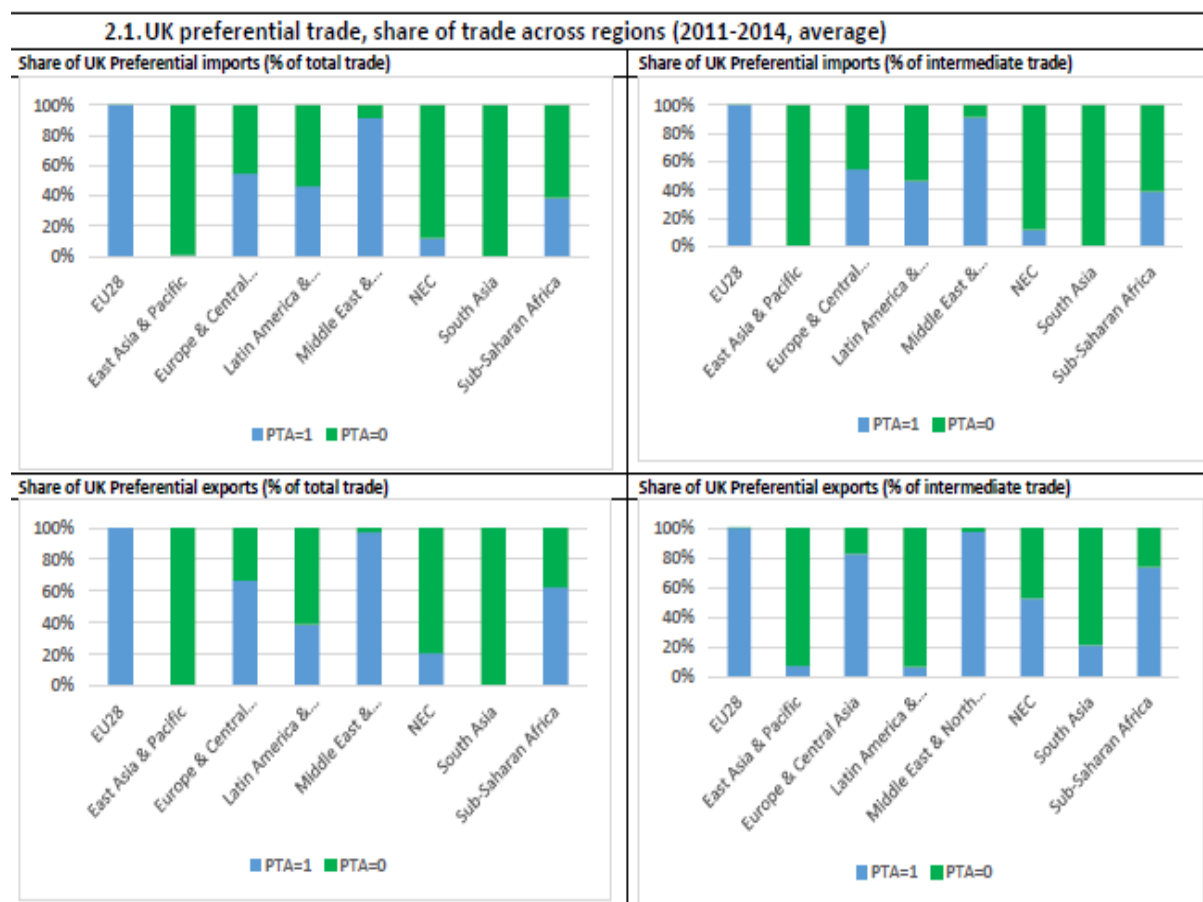


Table 2.1: UK Preferential trade, average (2011-2014)

	UK exports, Millions (US dollars)	Perc.	UK imports, Millions (US dollars)	Perc.
Preferential	266,133	60%	374,327	64%
Non preferential	175,165	40%	210,836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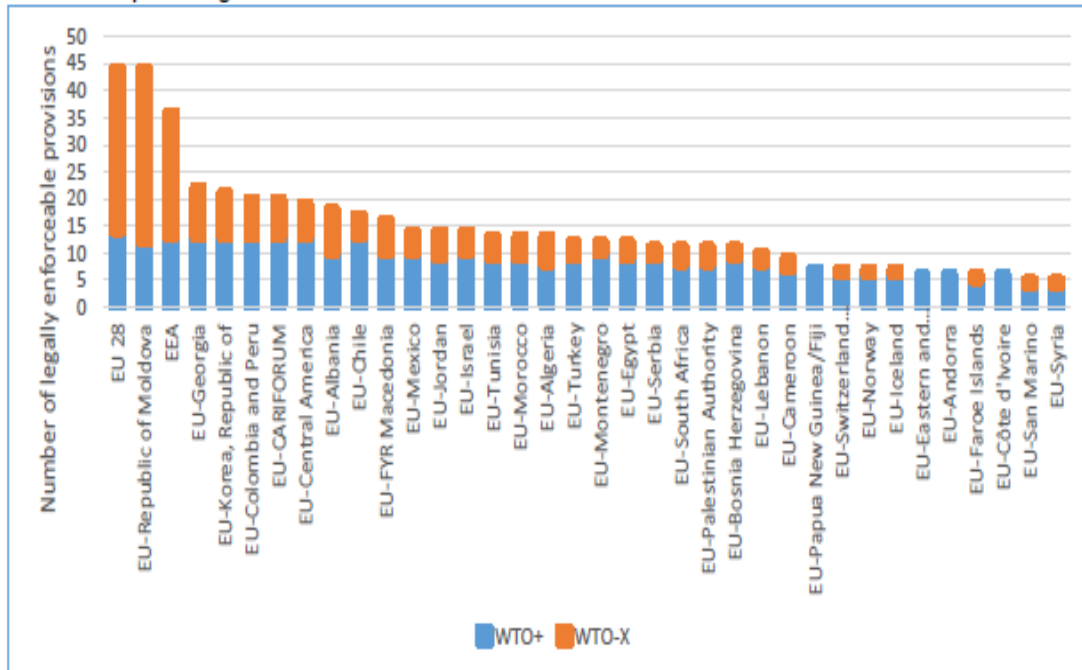
Table 2.2: UK Preferential trade in intermediates, average (2011-2014)

	UK imports, Millions (US dollars)	Perc.	UK exports, Millions (US dollars)	Perc.
Preferential	49,100	60%	37,600	56%
Non preferential	33,100	40%	29,200	44%

Source: Author's calculations based on WTO RTA database and UN Comtrade

FIGURE 3. UK TRADE AGREEMENTS AND DEPTH

3.1. UK Deep trade agree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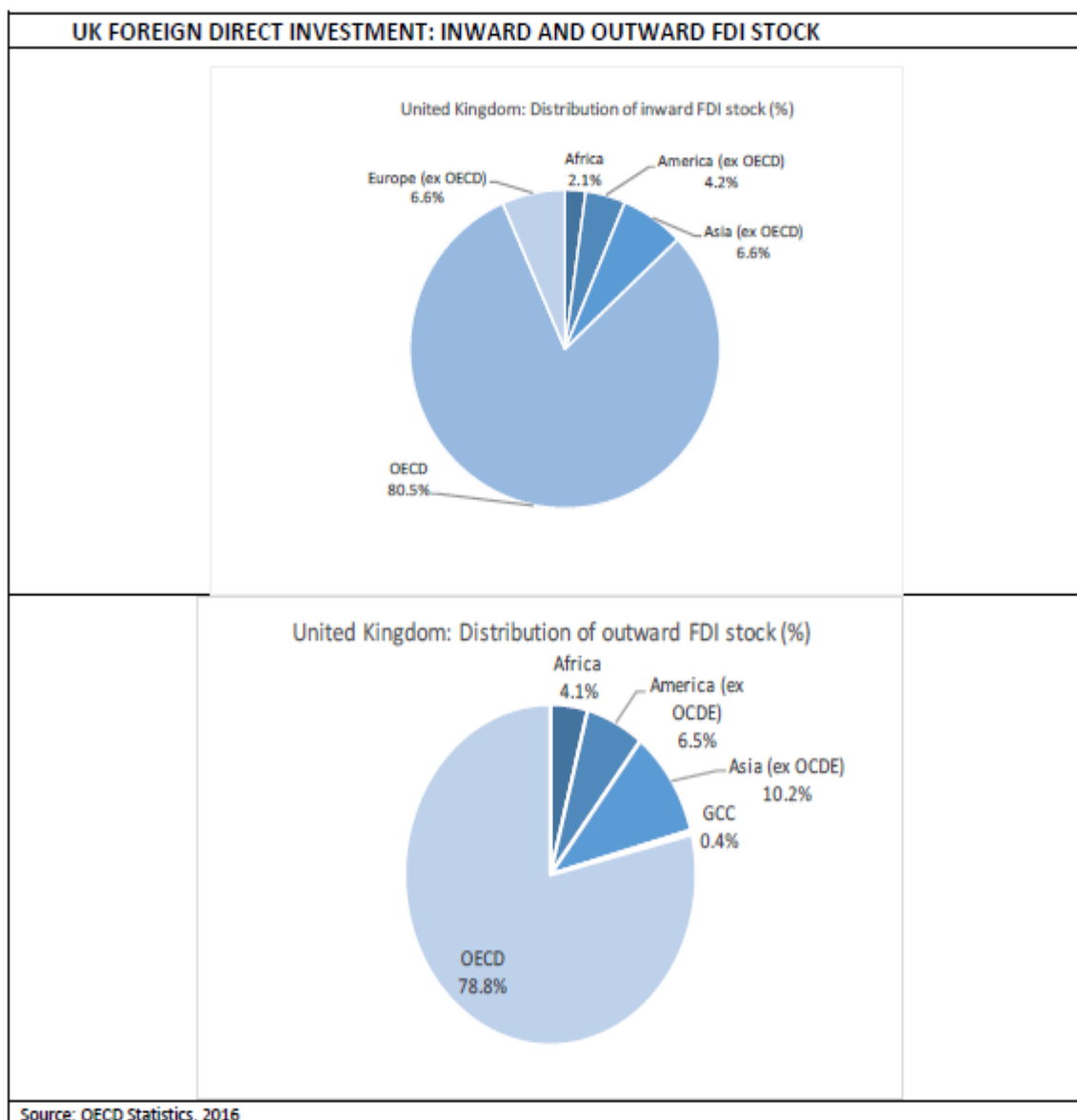
3.2. UK Trade Agreements and Depth

Agreement	Total depth	Agreement	Total depth
EU 28	44	EU-Israel	14
EEA	36	EU-Jordan	14
EU-Albania	18	EU-Korea, Republic of	21
EU-Algeria	13	EU-Lebanon	10
EU-Andorra	6	EU-Mexico	14
EU-Bosnia Herzegovina	11	EU-Montenegro	12
EU-Cameroon	9	EU-Morocco	13
EU-CARIFORUM	20	EU-Norway	7
EU-Central America	19	EU-Palestinian Authority	11
EU-Chile	17	EU-Papua New Guinea/Fiji	7
EU-Colombia and Peru	20	EU-Republic of Moldova	44
EU-Côte d'Ivoire	6	EU-San Marino	5
EU-Eastern and Southern Africa States Interim EPA	6	EU-Serbia	11
EU-Egypt	12	EU-South Africa	11
EU-Faroe Islands	6	EU-Switzerland Liechtenstein	7
EU-FYR Macedonia	16	EU-Syria	5
EU-Georgia	22	EU-Tunisia	13
EU-Iceland	7	EU-Turkey	12

< 투자 >

- 영국은 미국, 중국(홍콩 포함) 다음으로 외국인투자(stock기준)를 많이 받은 국가: 2014년 1조파운드 상회
 - ✓ 영국은 유럽내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국가.

FIGURE 4. UK INVESTMENT LINKAGES WITH THE REST OF TH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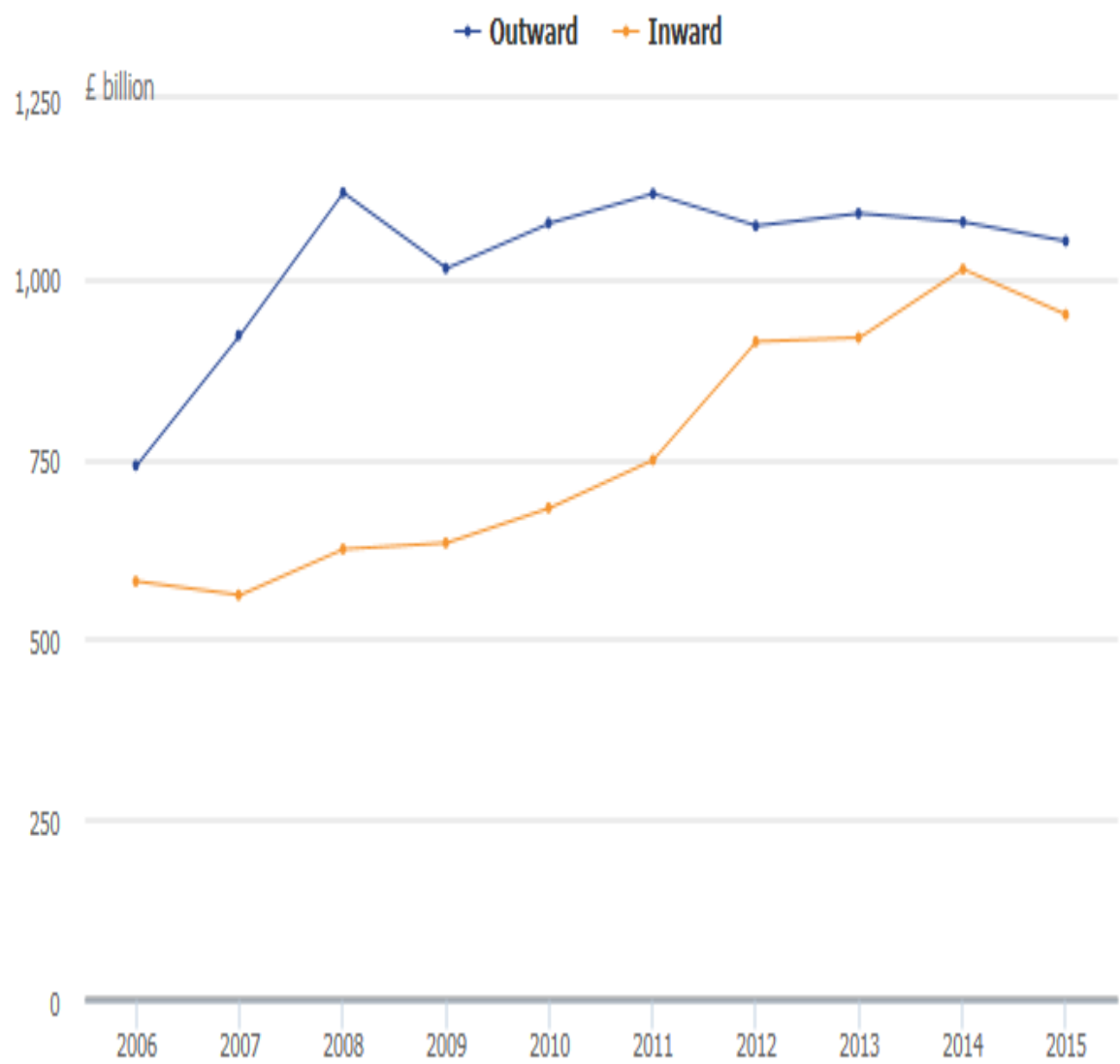


3.1 FDI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s in the United Kingdom analysed by area and main country, 2006 to 2015

		€ million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EUROPE		57.2	58.3	58.2	61.2	58.4	57.6	59.2	60.8	59.3	58.3
	EU	51.7	51.8	50.8	54.3	50.9	48.9	49.5	50.3	48.4	45.4
	AUSTRIA	0.1	0.2	0.2	0.1	0.2	0.3	0.6	0.3	0.2	0.2
	BELGIUM	1.0	0.8	0.7	0.6	1.0	2.1	1.1	2.7	2.6	2.1
	CYPRUS	0.0	0.1	0.1	0.0	0.3	0.3	0.4	0.4	0.4	0.4
	CZECH REPUBLIC	#VALUE!	0.0	0.0	0.0	0.0	0.0	0.0	0.0	0.0	#VALUE!
	DENMARK	0.7	0.9	1.4	0.8	0.5	0.5	0.7	1.0	0.6	0.7
	FINLAND	0.1	0.1	0.1	0.1	0.1	0.1	0.2	0.2	0.1	0.1
	FRANCE	10.3	8.9	7.3	10.9	9.0	7.3	8.1	7.3	7.5	7.0
	GERMANY	9.4	10.4	11.0	9.8	6.9	6.1	6.8	5.4	5.0	5.3
	GREECE	0.0	0.0	0.0	0.1	0.1	0.1	0.0	0.1	0.0	0.0
	HUNGARY	0.0	0.0	0.0	0.0	#VALUE!	0.0	0.0	#VALUE!	(0.0)	0.0
	IRISH REPUBLIC	1.4	1.3	1.4	1.5	1.1	1.4	1.0	1.3	1.4	1.3
	ITALY	0.8	0.9	0.7	0.8	0.1	0.3	1.0	1.5	0.4	0.8
	LUXEMBOURG	2.8	3.4	4.2	7.4	8.9	6.9	6.2	7.8	7.1	7.9
	MALTA	0.0	0.0	0.0	0.0	0.1	0.0	0.1	0.1	0.1	0.1
	NETHERLANDS	20.7	19.0	21.2	16.9	17.2	17.3	16.3	16.1	17.8	14.7
	POLAND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PORTUGAL	0.0	0.0	0.0	0.1	0.1	0.0	0.1	0.1	0.0	0.1
	SPAIN	3.6	4.9	1.7	4.2	4.8	5.3	6.1	5.4	4.2	3.9
	SWEDEN	0.7	0.8	0.7	1.0	0.5	0.7	0.8	0.9	0.9	0.7
	EFTA	3.9	4.3	3.6	3.2	3.7	4.1	3.9	5.0	4.6	4.8
	NORWAY	0.2	0.3	0.2	0.3	0.2	0.3	0.5	0.4	0.5	0.5
	SWITZERLAND	3.3	3.6	3.2	2.7	3.3	3.5	3.2	4.3	3.9	4.0
	OTHER EUROPE	1.7	2.3	3.8	3.7	3.8	4.5	5.8	5.4	6.3	6.2
	UK OFFSHORE	1.6	2.1	3.5	3.6	3.7	4.3	4.9	5.1	6.1	6.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THE AMERICAS	Americas	34.6	31.5	33.5	31.2	33.3	33.1	32.8	30.4	31.9	34.5
	CANADA	3.3	3.5	3.0	3.0	2.7	2.3	1.6	2.1	2.1	1.8
	USA	29.4	25.5	27.3	25.2	27.2	27.5	28.0	23.7	23.9	26.5
ASIA		6.8	8.4	6.8	5.7	6.8	7.6	6.9	8.1	7.3	7.7
	NEAR & MIDDLE EAST	1.8	0.9	0.5	0.5	0.5	0.6	0.4	0.5	0.6	0.7
	OTHER ASIAN COUNTRIES	5.0	7.4	6.2	5.2	6.3	7.0	6.5	7.6	6.7	7.1
	CHINA	0.0	0.0	0.0	0.1	0.1	0.1	0.1	#VALUE!	0.1	0.2
	HONG KONG	#VALUE!	#VALUE!	1.1	0.9	1.1	2.3	1.1	1.3	1.3	1.2
	INDIA	0.1	0.2	0.5	0.3	0.4	0.4	0.2	0.2	0.2	0.9
	JAPAN	2.5	3.6	4.0	3.0	3.3	3.5	3.9	3.9	3.9	4.3
	SINGAPORE	0.7	2.2	0.2	0.5	0.8	0.5	0.4	0.4	0.8	0.2
	SOUTH KOREA	0.1	0.1	0.1	0.1	0.4	0.1	0.3	0.3	0.2	0.2
AUSTRALASIA & OCEANIA		1.3	1.5	1.1	1.8	1.2	1.5	0.9	0.4	1.2	1.2
	of which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AUSTRALIA	1.2	1.5	1.1	1.8	1.2	1.3	0.8	#VALUE!	1.1	1.1
	NEW ZEALAND	0.1	0.1	0.0	0.0	0.0	0.0	0.1	#VALUE!	0.0	0.1
AFRICA		0.1	0.2	0.3	0.2	0.2	0.2	0.1	0.3	0.3	0.3
	of which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SOUTH AFRICA	0.0	0.2	0.2	0.1	0.1	0.1	0.0	0.1	0.2	0.2
WORLD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OECD	92.2	90.4	89.9	90.6	89.1	87.3	87.6	85.1	83.6	83.4
	CENTRAL & EASTE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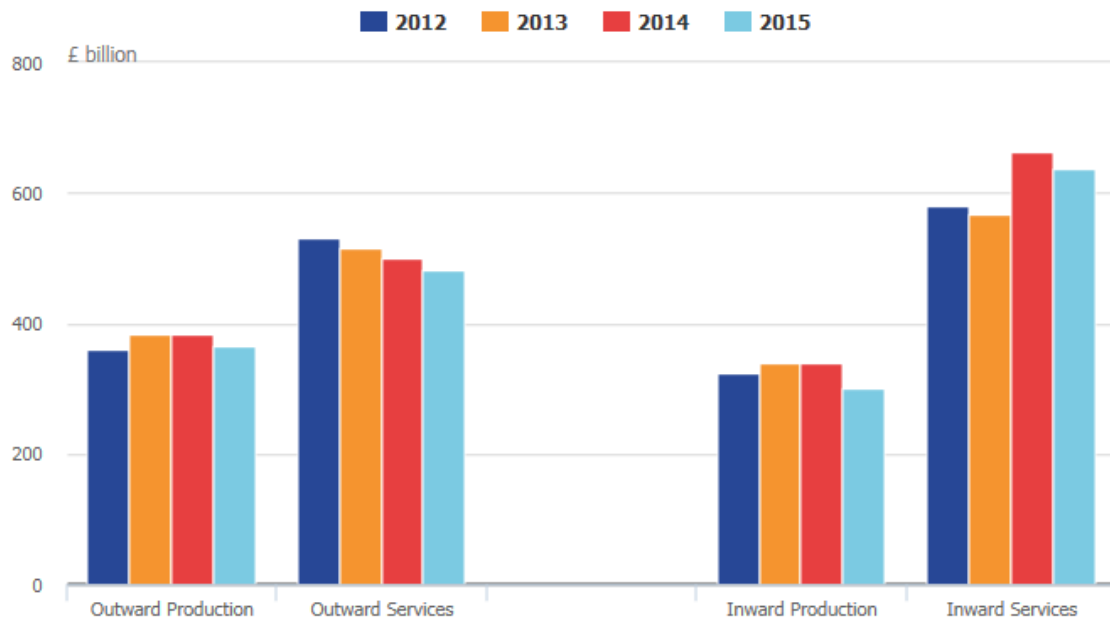
3.1 FDI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s abroad analysed by area and main country, 2006 to 2015 (Directional)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Europe	54.3	59.4	59.9	57.8	59.9	57.6	54.6	50.6	48.7	50.1
EU	42.4	46.5	48.1	49.7	52.4	49.9	47.0	41.7	41.3	42.7
BELGIUM	0.6	0.9	1.1	1.6	4.0	3.7	1.6	1.1	1.0	1.4
CZECH REPUBLIC	0.1	0.1	0.1	0.1	0.1	0.0	0.1	0.2	0.2	0.2
DENMARK	1.0	0.7	1.0	0.7	0.8	0.6	2.3	0.7	0.7	0.6
FINLAND	0.2	0.3	0.1	0.0	0.1	0.1	0.0	0.1	0.1	0.1
FRANCE	4.9	4.8	5.0	4.9	5.9	5.3	6.6	2.3	5.3	5.8
GERMANY	2.4	2.2	2.3	2.8	2.2	2.0	1.4	1.9	1.9	1.7
IRISH REPUBLIC	3.6	2.7	2.2	3.5	3.8	4.1	4.1	2.5	3.0	3.7
ITALY	1.1	1.7	1.1	1.3	1.2	1.1	1.0	0.9	1.0	1.1
LUXEMBOURG	8.4	11.3	12.0	13.1	13.8	13.6	11.4	9.6	10.0	8.8
MALTA	0.3	0.4	0.2	0.2	0.1	0.0	0.2	0.0	0.2	0.2
NETHERLANDS	12.5	13.8	12.2	13.0	12.3	11.8	12.0	10.3	11.3	12.0
POLAND	0.3	0.2	0.3	0.5	0.4	0.4	0.4	0.4	0.5	0.6
SPAIN	3.4	4.3	6.9	4.6	4.5	4.0	3.4	0.4	3.8	4.3
SWEDEN	2.4	2.0	2.4	2.4	2.2	2.2	1.8	1.9	1.6	1.6
EFTA	1.7	1.7	1.9	2.5	2.4	2.1	2.4	2.6	1.6	2.1
SWITZERLAND	1.4	1.4	1.5	1.9	1.9	1.7	2.0	1.8	1.4	1.8
OTHER Other Europe	10.2	11.1	9.9	5.6	5.1	5.6	5.1	6.3	5.9	5.3
RUSSIA	0.8	0.8	1.0	1.0	0.9	0.7	0.5	1.3	1.3	0.8
UK OFFSHORE INC.	8.9	9.4	7.9	3.6	3.2	3.8	3.6	3.9	3.7	3.6
Americas	34.6	31.0	30.2	29.2	24.5	25.8	27.4	30.0	34.1	32.6
BERMUDA	1.9	1.6	2.3	1.7	1.6	1.5	1.4	1.5	2.5	1.4
BRAZIL	0.4	0.3	0.5	0.4	0.6	1.3	1.4	0.8	1.4	1.5
CANADA	2.6	3.4	2.8	2.9	3.4	2.8	2.9	2.6	2.6	1.6
MEXICO	0.3	0.2	0.1	0.1	0.1	0.2	0.5	0.1	0.6	0.7
USA	24.4	21.0	21.1	21.9	16.9	18.2	18.4	15.5	23.6	22.6
Asia	7.3	5.5	6.4	7.5	9.3	10.0	10.0	11.5	11.3	11.8
NEAR & MIDDLE EAST C	0.9	1.0	1.2	1.7	2.1	2.3	1.3	2.6	1.2	1.5
GULF ARABIAN	0.6	0.6	0.7	1.2	1.4	1.6	1.0	2.2	0.6	0.9
OTHER ASIAN COUNTRIES	6.4	4.6	5.2	5.8	7.2	7.7	8.8	8.8	10.0	10.2
CHINA	0.3	0.3	0.4	0.5	0.6	0.6	0.6	0.4	0.8	0.9
HONG KONG	3.0	1.6	1.7	1.7	1.8	1.8	4.0	1.4	4.8	4.1
INDIA	0.3	0.5	0.4	1.0	1.1	1.2	0.5	0.3	0.3	1.1
JAPAN	0.3	0.1	0.1	0.3	0.3	0.5	0.6	0.3	0.4	0.5
SINGAPORE	0.9	0.8	1.3	0.9	0.9	1.0	0.8	1.0	1.5	1.7
SOUTH KOREA	0.5	0.4	0.3	0.3	0.4	0.4	0.4	0.2	0.4	0.3
THAILAND	0.2	0.1	0.1	0.1	0.1	0.1	0.1	0.1	0.2	0.2
AUSTRALIA	1.6	1.8	1.6	1.6	3.1	3.4	3.9	4.4	1.9	1.7
Africa	2.0	2.2	1.8	3.6	3.1	3.1	4.0	3.3	4.0	3.7
NIGERIA	0.1	0.1	0.1	0.2	0.2	0.2	0.2	0.1	0.1	0.4
World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OECD	73.8	75.1	76.5	79.8	79.4	78.4	76.6	74.8	72.8	72.6

Figure 1: UK outward and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positions, 2006 to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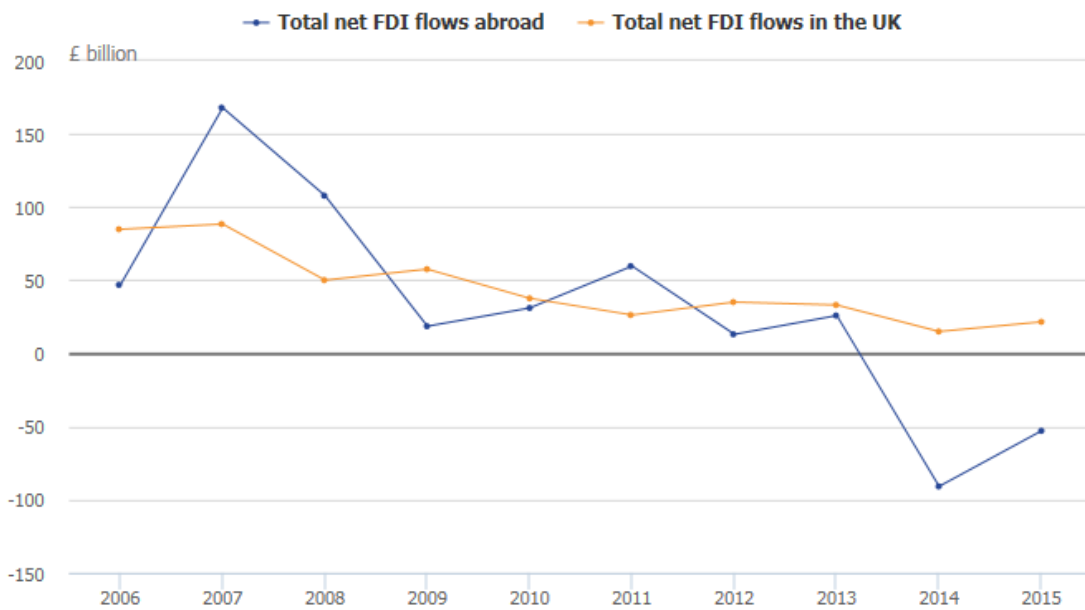
Sourc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Figure 4: UK outward and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positions by industry, 2006 to 2015



Sourc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Figure 9: UK outward and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flows, 2006 to 2015



Sourc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3. 정치적 측면

< 영국과 NATO >

- 영연방: 싱가포르 등
- 지속적 외교 및 집단 안보의 공조 공감대.

< Scoxit> the Economist Feb 24.

- Brexit에도 불구하고 Scoxit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 ✓ 62%의 스캣츠는 Brexit 반대.
 - ✓ EU 잔류하기 위해서는 Britain에 속해야 한다는 논리가 있었음: 독립하면 EU 재가입 신청해야 하는데 스페인 반대. 까딸루냐 독립을 두려워하는, 로 부결될 것임.
 - ✓ 최근 스코틀랜드 경제가 안 좋음. 특히 유가 하락이 결정적 역할. 금융분야의 침체도 가세함.
- 만약 독립한다면 영국과의 국경 문제 발생. 아일랜드로는 해결이 안될것임. 스코틀랜드는 EU에 비하여 영국과 4배 이상의 교역을 하고 있음.

< Catalexit >

- 까딸루나는 EU 잔류는 희망하지만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은 희망.
 - ✓ 스페인에 남고 안 남는 것이 카탈란의 생활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오히려 실업, 가난, 부정이 더 큰 문제라는 견해도 있음(까딸루냐 반민족주의 정당)
 - ✓ 최근 마드리드는 카탈루냐의 독립시도에 대해서 스페인 헌법 제115조(지방정부가 헌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스페인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발동 검토 관측.

4. Related Research

- Jan Fidrmuc and Jarko Fidrmuc, Disintegration and Trade,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11(5), 811-829, 2003
- ✓ 소련,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3개 연방의 해체 전후의 무역량에 관하여 실증 분석
- ✓ 연방 해체 전에는 정상적인 무역집중도보다 24배(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43배(소련 및 체코슬로바키아) 이상의 높은 무역집중도를 보임
- ✓ 연방 해체 후에는 무역집중도가 급감. 그러나 아직도 높은 무역집중도 보임. 2배(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7배(체코슬로바키아), 13배(발틱3국), 30배(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 Fredrik Wilhelmsson, Lund University, June 2006, Trade Creation, Diversion and Displacement of the EU Enlargement Process, mimeo.
- ✓ 중·동구 국가들의 EU 편입으로 인한 무역창출, 전환, 무역대체(displacement) 효과를 측정
- ✓ 상당한 무역창출과 제한된 무역전환 효과 발견되었으나 무역대체 효과는 나타나지 않음.

- Allen, Gasiorek and Smith, Trade Creation and Trade Diversion, the Single Market Review Series, Subseries IV – the Impact on Trade and Investment, December 1996.
- ✓ 3가지 접근법

- 통계분석: SMP은 역내 및 역외 개방도를 제고
- 계량분석: SMP는 무역창출 효과 있지만 전환효과는 발견되지 않음.
- CGE 모형

◆ Questions: EU의 무역창출(+) 있었고 및 무역전환 없었다는 결과를 Brexitt에 대입할 수 있는지 또는 대입한 결과는 어떠할지?

- 즉, 영국과 EU간 무역창출이 있었고 역외국 무역에 대한 전환은 없었음. Brexit 이후에는 부의 무역창출 즉, 영국내 자체 생산 증가 및 EU역외국과의 무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가능할 것임.

- Jessica Baker, Oriol Carreras, Monique Ebell, Ian Hurst, Simon Kirby, Jack Meaning, Rebeeca Piggot and James Warren, the Short-Term Economic Impact of Leaving the EU, National Institute Economic Review, no. 236, May 2016.
- Monique Ebell and James Warren, the Long-Term Economic Impac of Leaving the EU, National Institute Economic Review, no. 236, May 2016. NiGEM 모델 사용.
- Monique Ebell, Assessing the Impact of Trade Agreements on Trade, National Institute Economic Review, no. 238, November 2016.
- ✓ 영국이 Brexit후 EU와의 부분적인 FTA를 체결하더라도 상당한 무역감소 초래(상품 35~44% 감소, 서비스 61~65% 감소)
- ✓ 아무런 FTA도 맺지 않을 경우 상품 58~65% 감소 전망.
- ✓ 미국, 개도국과의 FTA는 5%의 무역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

[참고: Lisbon Treaty]

Article 49

Any European State which respects the values referred to in Article 2 and is committed to promoting them may apply to become a member of the Union. The European Parliament and national Parliaments shall be notified of this application. The applicant State shall address its application to the Council, which shall act unanimously after consulting the Commission and after receiving the assent of the European Parliament, which shall act by an absolute majority of its component members. The conditions of admission and the adjustments to the Treaties on which the Union is founded, which such admission entails, shall be the subject of an agreement between the Member States and the applicant State. This agreement shall be submitted for ratification by all the contracti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The conditions of eligibility agreed upon by the European Council shall be taken into account

Article 50

1. Any Member State may decide to withdraw from the Union in accordance with its own constitutional requirements.

2. A Member State which decides to withdraw shall notify the European Council of its intention. In the light of the guidelines provided by the European Council, the Union shall negotiate and conclude an agreement with that State, setting out the arrangements for its withdrawal, taking account of the framework for its future relationship with the Union. That agreement shall be negoti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8(3)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It shall be concluded on behalf of the Union by the Council, acting by a qualified majority, after obtaining the consent of the European Parliament.

3. The Treaties shall cease to apply to the State in question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withdrawal agreement or, failing that, **two years after the notif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unless the European Council, in agreement with the Member State concerned, unanimously decides to extend this period.

4.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s 2 and 3, the member of the European Council or of the Council representing the withdrawing Member State shall not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s of the European Council or Council or in decisions concerning it.

A qualified majority shall be defi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38(3)(b)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5. If a State which has withdrawn from the Union asks to rejoin, its request shall be subject to the procedure referred to in Article 49.

Article 218

1. Without prejudice to the specific provisions laid down in Article 207, agreements between the Union and third countries o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shall be negotiated and conclud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

2. The Council shall authorise the opening of negotiations, adopt negotiating directives, authorise the signing of agreements and conclude them.

3. The Commission, or the 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where the agreement envisaged relates exclusively or principally to the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shall submit recommendations to the Council, which shall adopt a decision authorising the

opening of negotiations and, depending on the subject of the agreement envisaged, nominating the Union negotiator or the head of the Union's negotiating team.

Article 238

1. Where it is required to act by a simple majority, the Council shall act by a majority of its component members.

2. By way of derogation from Article 16(4)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s from 1 November 2014 and subject to the provisions laid down in the Protocol on transitional provisions, where the Council does not act on a proposal from the Commission or from the 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the qualified majority shall be defined as at least 72% of the members of the Council, representing Member States comprising at least 65% of the population of the Union.

3. As from 1 November 2014 and subject to the provisions laid down in the Protocol on transitional provisions, in cases where, under the Treaties, not all the members of the Council participate in voting, a qualified majority shall be defined as follows:

(a) A qualified majority shall be defined as at least 55% of the members of the Council representing the participating Member States, comprising at least 65% of the population of these States.

A blocking minority must include at least the minimum number of Council members representing more than 35% of the population of the participating Member States, plus one member, failing which the qualified majority shall be deemed attained;

(b) By way of derogation from point (a), when the Council does not act on a proposal from the Commission or from the 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the **qualified majority shall be defined as at least 72% of the members of the Council representing Member States comprising at least 65% of the population of these States.**

WTO, July 2016.